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12】

2011. 11. 14.

중동 민주화 시위 1년, 성과와 과제

목 차

I. 민주화 시위의 원인과 파급 과정	1
II. 민주화 시위의 결과와 성공 요인	5
III. 전망	10



■ 2010년 12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을 비롯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어 정권 교체, 일부 민주화 조치 시행 등 성과를 거둔 반면에,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 등 불가피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시위가 최초로 시작된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시위의 배경,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I. 민주화 시위의 원인과 파급 과정

1. 시위의 원인

□ 현 정부의 장기 독재에 따른 정치적 부패 만연

-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00년대 중반에 독립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 정부가 사실상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집권하는 가운데 지도층의 축재¹⁾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권 탄압이 빈발하였음.
- 이들 국가는 정치 체제가 왕정, 이슬람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등 다양하나, 정부의 집권기간이 매우 길다는 공통점이 있음.
 - 걸프협력회의²⁾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 회원국(바레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과 요르단, 모로코는 왕정, 이란은 이슬람 고유의 공화제, 리비아는 고유의 인민직접참여제를 채택하고 있음. 알제리, 예멘 등 여타 국기들은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 비교적 현대적 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왕권이 세습되는 왕정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 국가원수의 집권 기간은 리비아 42년, 예멘 33년, 이집트 30년, 튀니지 24년, 알제리 12년, 시리아 11년³⁾ 등임.

1) 이집트 무바라크 일가의 재산은 약 700억 달러, 리비아 카다피 일가는 약 1,5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음.

2) 걸프만 연안의 6개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설립한 기구임.

3) 1970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사드 대통령이 2000년에 사망한 후, 아사드의 2남인 현 대통령 바샤르(Bashar al-Assad)가 권력을 승계하였음.



□ 극심한 빈부 격차, 물가·실업률 급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만 가중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일부 집권층만이 그 혜택을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으며 특히 오랜 독재체제 하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음
- 총 인구 중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2005년 기준)은 이집트가 18.5%이었으며, 특히 중동 최빈국인 예멘은 무려 46.6%에 달했음.
- 각종 정부 보조금 등 혜택들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료품 등의 국제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극빈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음.
- 이집트의 경우, 2010년에 빵, 곡물, 설탕 등 필수 식료품의 가격이 급등(소비자물가상승률 11.1%)하였는데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급속한 인구 증가로 대부분 국가의 공식 실업률이 10% 내외에 달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 튀니지에서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하여 민주 혁명을 촉발시킨 무함마드 부아지지(26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음.
-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는데,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익숙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서구 문화와 빈번히 접촉하고 IT 기기를 활용하는 청년층의 대두는 정치·경제 불만을 표출시키는 기반이 되었음.

□ 일부 국가의 종교, 지역 간 갈등 누적

- 바레인에서는 소수인 수니파⁴⁾가 각종 경제적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대다수 시아파(인구의 약 70%)를 지배하여 왔는데, 주변국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시아파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왕실의 차별정책 철폐 등을 요구하였음.
- 리비아는 카다피가 집권한 이후에 수도 트리폴리(Tripoli) 중심의 서부 지역에 비해 벵가지(Benghazi) 중심의 동부 지역의 주민을 고의로 차별 대우하여 양 지역의 역사적 대립을 심화시켰음. 벵가지는 시위 발생 후 반군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음.

4) 이슬람교는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 사후에 후계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종파가 분리되었음. 수니파는 무함마드 이후의 4명의 칼리프(수장)를 모두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제4대 칼리프)와 그 후계자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중 시아파는 15%에 불과함.



2. 시위의 주요 파급 과정

□ 대규모 시위는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이집트, 예멘, 리비아 등으로 확대

- 튀니지에서는 2010년 12월 중순에 수도 튀니스에서 200km 떨어진 시디 부지드(Sidi Bouzid)에서 수백 명이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며 반정부 시위를 시작함.
 - 초기에 시위를 강경 진압하던 정부가 고용 창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유화적 입장으로 선화하였으나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결국 벤 알리 대통령이 2011년 1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정권이 붕괴됨.
- 이집트에서는 2011년 1월 25일에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던 시민들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함.
 - 무바라크가 내각 해산(1. 29), 9월로 예정된 대선 불출마(2.1), 공공 부문의 급여 인상 등을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함.
 - 중립을 유지하였던 군부도 국민의 편에 서게 되자 2월 11일에 무바라크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시위 발생 18일만에 체제가 붕괴됨.
- 예멘에서는 2011년 2월 초부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됨.
 -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던 살레 대통령이 연정 구성을 제의했으나 야권이 거부하였고 특히 영향력이 큰 주요 부족장들도 연정 참여 반대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함. 3월 21일에는 살레의 최측근을 포함한 군 장성 3명이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공직자들의 사임 발표가 이어지는 등 집권층의 이탈도 가속화됨.
 - 6월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 부상한 후 치료차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다가 9월에 귀국한 살레 대통령은 곧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집권하고 있음.
- 리비아에서는 2011년 2월 15일에 카다피 국가지도자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시작됨.
 - 초반부터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하고 부족 간 갈등이 더해지면서 시위는 친정부 세력과 반군이 대립하는 내전으로 변모되었고 이후 UN의 군사 개입 승인과 비행금지구역 설정(3. 17), NATO의 공습 개시(3. 19)등을 통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음.
 - 반군은 8월 23일에 정부군의 주요 거점인 수도 트리폴리의 대통령궁을 함락시켰으며 10월 20일에 카다피를 사살한 후 10월 23일에 '리비아의 해방'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시위 발생 8개월 만에 내전이 종식되었음.



-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15일에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됨.
- 정부는 시위대에게 개혁조치를 약속하면서도 무장집단이 외국의 지원을 받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대와 탱크, 전투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유혈진압을 지속하고 있음.
- 4월 22일에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72명이 사망하였고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 기간(8월 1~29일)에도 정부가 관례를 깨고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였음. UN은 현재까지의 사망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등에서도 시위 발생

- 바레인에서는 소수인 수니파의 오랜 권력 독점에 항의하여, 2011년 2월 14일에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시아파가 주축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대폭적인 개각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확산되자 칼리파 국왕은 3월 14일에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⁵⁾ 3월 15일에 3개월간의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시위는 오히려 격화됨.
- 또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등 주변국에서 파병 반대 및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국제적 종파 갈등으로 발전됨.
- 요르단에서는 2011년 1월 말부터 수도 암만(Amman)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등에 항의하며 사미르 리파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됨.
- 압둘라 국왕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2월 1일에 총리가 사임하였으나, 국왕의 내각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란에서는 수도 테헤란(Teheran)에서 2011년 2월 20일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짐.
- 정부가 2월 14일에 집회 금지와 야당지도자의 가택 연금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자 치안 부대가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⁶⁾
-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자 2월 22일에 야당 지도자인 메흐디 카루비(Mehdi Karroubi) 전 국회의장의 측근이 시위대에게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반정부 시위는 중단됨.

5) GCC의 바레인 파병은 시아파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6) 정부는 2009년 6월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수백만 명이 참가했던 대규모 시위의 경험을 고려하여 시위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였음.



- 특히 시위대가 최고종교지도자 하메네이의 퇴진도 요구한 점이 주목됨. 또한 수니파가 지배하는 아랍권과 달리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이란이 아랍권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모로코에서 2011년 2월 20일 전면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알제리에서 3월 4일에 제2 도시인 오란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쿠웨이트에서는 3월 8일 청년단체들이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 및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소규모의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음.

II. 민주화 시위의 결과와 성공 요인

1. 시위의 결과

□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는 정권 교체에 성공

- 튀니지에서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 지역에서 최초로 2011년 10월 23일에 총선이 실시되었음⁷⁾.
 - 푸아드 메바자(Fouad Mebazaa) 하원의장이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서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간수치 총리 등 구 정권의 인사들이 요직에 유임되자 반대 시위가 계속되어 2011년 1월에 각료 23명 중 12명을 교체한 바 있음. 이후에도 구 정권 인사를 보호하려는 과도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었음.⁸⁾
 - 헌법 개정과 총선 준비가 목적인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은 100여 개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실시되어 투표율(참정)이 90%를 상회하였으며, 온건 이슬람 정당인 ‘엔나흐다(Hizb al-Nahda)’당이 약 40%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될 전망이다. 제헌국회는 1년 이내로 운영될 계획이며 대선과 총선은 2012년에 실시될 예정임
- * 엔나흐다당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영향을 받아 1981년에 창당되어 1987년 총선에서는 제2당으로 부상한 바 있으나 벤 알리 정권 하에서 ‘이슬람주의자 운동’이란 명목으로 탄압을 받다가 2011년 4월에 합법화되었음.

7) 총선은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0월로 연기되었음.

8) 2011년 8월 15일에는 대도시에서 근래 최대 규모인 약 2,000명의 시민이 가두 시위에 참가한바 있음.



- 이집트에서는 군사평의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SCAF)와 과도정부가 민간정권 출범 시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SCAF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2011년 3월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77%의 찬성률로 통과됨.
- 총선은 2011년 11월~2012년 3월에 3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개헌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러질 대선의 일정은 아직 미정임. 11월 29일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제1차 총선에서는 최근 튀니지 총선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가치의 존중’을 내세운 자유정의당(Freedom and Justice Party)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자유정의당은 1954년 이래 활동이 금지되었던 무슬림형제단이 제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설립한 정당으로 그간 세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최소 5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SCAF와 과도정부 사라프(Essam Sharaf) 수상의 부진한 개혁 성과 등에 실망한 국민들이 7월 이후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음.
-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세력이 2011년 3월 5일에 리비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로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NTC)를 설립함.
- 프랑스가 2011년 3월 10일에 NTC를 인정한 후 서방,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잇따라 NTC를 리비아 유일의 합법적 기구로 인정하였음.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연합(AU)과 남아공도 내전이 사실상 반군의 승리로 끝나자 2011년 9월 중에 NTC를 인정하였음.
- 잘릴(Moustapha Abdel-Jalil) NTC 위원장은 ‘리비아가 완전히 해방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자신의 약속대로 10월 31일에 사임하고, 압둘라힘 알킵¹⁰⁾이 임시총리로 선출되어 2주일 내에 제헌국회를 준비할 새 내각을 구성할 계획임.
- * 카다피를 축출하기 위해 3월 19일에 시작되었던 NATO의 군사작전도 같은 날에 공식 종료되었음

9) 대통령은 임기가 6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령을 6개월이상 발령할 수 없음.

10) NTC 위원 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총리로 선출되었음. 198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한 후 UAE 석유연구소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에너지 부문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리비아 내에 다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내전 과정에서 반군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예멘과 시리아는 집권세력이 시위대에 강력한 무력대응 지속

- 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사퇴 의사 발표를 수 차례 반복하면서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음
 - 살레는 2월 중순에도 민주화 시위가 불순한 외부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다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들을 용의가 있다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고, 2월 21일에는 선거를 통해서만 물러나겠다고 하였다가 3월 2일에는 올해 안에 사퇴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4월 26에는 GCC의 중재안에 따라 30일 내에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행치 않았음. 10월 초에도 수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반복함.
 - * 4월 21일 GCC는 살레 대통령에게 30일 내의 퇴진과 부통령에게 권력 이양, 60일 안에 대선 실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 하였으나 시위를 주도하던 청년단체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음
 - UN 안보리는 2011년 10월 21일에 살레의 시위대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 201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10월 24일 살레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다. 아권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음. 유혈 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이미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시리아의 바샤르 대통령도 국제 사회의 퇴진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여전히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 폭력 진압하고 있음.
 - 시리아는 4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인데다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서방 세계가 리비아의 경우와 같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 시리아는 이집트와 함께 아랍통일운동을 주도하였고 레바논,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도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은 향후의 중동평화협상에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잠재적 협상 상대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UN 안보리도 2011년 4월에 시리아 성명 채택을 논의하다가 합의에 실패한 바 있으며, 8월 3일에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는, 실효성 없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음.
 - * 군사 개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의 상황이 리비아와 다르므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개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음. NATO도 UN 안보리 결정과 아랍권 지지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일부 중동 국가들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분적 민주화 조치 시행

- 수단의 오미르 알-바쉬르 대통령은 2015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카 총리도 2014년 임기 종료 후에는 물러나겠다고 약속하였음.
- 사우디, 바레인 등 왕정국가도 민주화, 경제 불평등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월 말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370억 달러 규모의 복지지원책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 압둘라 국왕이 건국 이래 최초로 2015년부터 여성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2. 시위의 주요 성공 요인

□ 시위 파급에는 이 지역의 종교, 인종, 언어, 문화적 동질성도 일조

- 중동·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동질적인 언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정변이나 혁명이 발생할 경우에 그 영향력이 급속히 주변국으로 파급되었음.
 - 특히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서 정치, 사회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유목민의 전통 위에 형성된 이슬람교는 부족주의 가부장제 문화를 형성하였고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음¹¹⁾.
 - 서방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이 지역 국가들은 1900년대 중반에 독립한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등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1970~90년대 남부·동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30여 개 국가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는 민족적, 종교적 동질성이 매우 높아 시위대가 단결할 수 있었고 부족이나 종파간 분쟁으로 변질되지 않았음.
 - 민족적으로 튀니지는 아랍족의 비율이 98%, 이집트는 이집트인의 비율이 99.6%로서 동일 혈통에 가깝고, 종교적으로 이슬람 수니파(튀니지 98%, 이집트 90%)가 주축임. 한편, 리비아, 예멘, 시리아는 부족국가의 성격이 강함.¹²⁾

11)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함. 유일신 알라에 대한 복종이자 종교·정치 지도자였던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임.

12) 리비아는 140여 개의 가문과 5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군대의 중립 유지도 큰 역할

- 튀니지, 이집트에서 군대는 시위 초기부터 중립을 선언하거나 무력 개입을 자제하였음.
- 튀니지는 대통령 일가와 보안군 일부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군부는 ‘국가, 국민, 혁명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이집트에서도 군부가 1952년에 ‘나세르 혁명’으로 왕정을 붕괴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격파하는 등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 민주화 시위기간 중에도 튀니지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집트 군부도 시위대를 공격하거나 경찰을 제지하지 않았음. 시위대에 발포한 주체는 대부분 경찰과 보안군이었음.
- 반면, 리비아, 예멘, 시리아의 군부는 정권의 사조직 성격이 강함.¹³⁾

□ 리비아에서는 원유를 둘러싼 서방국들의 이해관계, 아랍연맹과의 불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하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오랫동안 대립하여 왔으나, 서방국가들은 양질의 풍부한 원유를 보유한 리비아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 리비아는 2010년 기준 원유 매장량 464억 배럴(세계 점유율 3.4%, 아프리카 제1위), 생산량 166만 배럴/일의 산유국이며, 특히 세계 제1위의 저유황경질유 수출국임.
-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UN의 군사개입 승인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NATO의 공습을 아랍연맹이 묵인한 것은 카다피의 세속적 이슬람 정책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아랍연맹(Arab League)은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이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회원국은 22개국임. 아랍 연맹을 주도하는 국가는 이집트임.

13) 시리아에서는 시위대에 발포를 거부한 지역 경찰관을 군인이 처형했다는 설이 있고, 예멘에서는 군 지휘부 중 일부가 이탈하여 시위대에 가세하였으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계속하였음.



Ⅲ. 전망

□ 튀니지는 점진적 민주화가 기대되나 연정의 구성 여부, 제1당의 정책노선 등에 따른 가변성이 주변국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벤 알리 정권의 권력장악도가 주변국보다 낮았고 반정부 시위의 손실도 상대적으로 적음. 적은 인구(1,060만 명, 2011년)와 높은 교육수준, 강한 민족적·종교적 동질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 등도 민주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최대 관건은 구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이슬람 정당이 엔나흐다당의 부상에 힘입어 득세하면서 이슬람과 민주주의를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임. 이는 주변국 이집트와 리비아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엔나흐다당은 터키를 모델로 하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그러나 당대표인 라체드 간누치가 한 때 호메이니와 비교될 정도로 이슬람주의를 강조한 인물이어서 강경 이슬람주의로 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터키의 경우, 2002년 이래 집권 중인 터키 정의개발당(AKP)은 이슬람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해 터키를 신흥 경제국으로 발전시켰음.
- 또한 엔나흐다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정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아랍권에서 연정 논의 사례는 매우 드물며 1991년 알제리, 2006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슬람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무력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 군부는 치안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정부를 위한 국민의 합의가 붕괴되어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한 종전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이집트는 이슬람 세력이 부상할 것이나 종교 분쟁의 해결과 군부의 정치 개입 정도 등이 민주화 진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정권이 붕괴된 후에 잠재되어 있던 종교간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종교 간 화합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이집트의 종교는 이슬람교(대부분 수니파) 90%, 기독교 10%(콥트교 9%,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로 예정된 총선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지원하는 '자유정의당'이 제1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소수인 콥트기독교도(Coptic Christian)는 2011년 3월에 무슬림과 충돌하여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고, 10월 9일에도 남부 도시에 신축 중인 교회가 공격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여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들은 군부가 자신들에 대한 무슬림의 공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무바라크 장기집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던 군부는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과도정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무바라크가 사임 이전인 1월 29일에 사상 최초의 부통령으로 군 출신인 오마르 술레이만 정보국 국장을 임명한 사실이 군부의 영향력을 대변하고 있음.
- 특히 SCAF가 첫 하원선거를 11월 28일에, 상원선거를 2012년 1월29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총선에서 전체 의석 중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2/3, 개인 후보제로 1/3을 선출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은 구 정권 인사들에게 복귀 기회를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과도기 통치를 맡은 군부는 총선 이후에도 과도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총리, 각료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역내 이집트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이집트는 아랍연맹을 주도하는 아랍권의 맹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중재자이자 대테러 전쟁의 동반자로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적 다리 역할을 해 왔음. 이집트의 변화 방향과 정도는 전체 아랍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함.
- 무바라크가 사임하기 직전에 미국이 후임자로 지목했던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나, 이집트가 미국에서 매년 13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군부가 정권을 계승하는 한 친미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 리비아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군 내 다양한 세력 간의 분열, 대립 가능성 상존

- 카다피의 사망 이전부터 NTC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슬람 정당이 부상한 튀니지의 총선 결과도 이에 일조할 전망이다.
- 전 NTC 위원장 잘릴은 ‘리비아가 이슬람 국가로서 모든 입법은 샤리아(이슬람법)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내전 수행과정에서 단결했던 반군 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카다피 정권의 붕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할지가 불확실하며, 잠재된 이념의 차이와 부족·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관계, 전공(戰功)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일부 반군 그룹은 NTC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11년 7월 28일에 유니스(Abdel-Fattah Younis) 반군 총사령관이 내부세력에 의해 암살당한 것은 반군의 분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최악의 경우, 이라크와 같이 정파 및 부족 간 극심한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소수였던 수니파 정권이 붕괴되고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아직까지도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리비아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니파이므로, 이라크와 같이 종파 간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반군의 주축 세력인 와르팔라 부족이 카다피 정권에 협조했던 카다파 부족에 보복할 경우 부족 간 내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또한 내전 중에 정부군, 용병 및 반군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된 무기를 조속히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 치안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예멘, 시리아는 뚜렷한 대안 부재, 미국·서방국들의 이해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민주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예멘에는 알카에다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부 조직이 근거지를 두고 있어 살레 대통령을 퇴진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권력의 이양과정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치안 부재나 내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알카에다 등 무장세력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여 대테러 전쟁의 전략적 동맹국인 예멘의 민주화보다는 급격한 정변을 방지하는데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살레가 치료차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은 기소면제와 재정 지원을 댓가로 퇴진과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협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실제로 살레의 부재기간 3개월 중에 대통령직을 대행한 압두 하라 만수르 부통령은 별다른 통치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도처에서 약탈이 자행되는 등 정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살레의 장남 아메드가 이끄는 최정예 공화국수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에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시리아는 접경국 이스라엘과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산유량도 미미한 수준이며¹⁴⁾ 헤즈볼라 등 극단 이슬람 무장세력과 이란에 대한 지렛대로서 전략적 가치가 커서 서방으로서는 선불리 특히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나 이유가 미약함.
- 시리아는 이집트와 함께 아랍통일운동을 주도하였고 아랍연맹과 밀접한 관계이어서 리비아와 달리 국제적 무력 개입이 용이하지 않음. 아랍연맹은 11월 초에 시리아와 중재안(시위대 수감자 석방, 보안군 철수, 아랍연맹 감시단 수용, 아권과의 대화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반정부세력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함.
- * 리비아의 경우, 국토의 상당 부분에 사실상 카다피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였고 서방 국가들은 리비아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구체적 행동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국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아랍연맹의 지지도 획득한 바 있음.
- 시리아는 군사강국이고 이스라엘과 서방의 개입에 대항하는 아랍의 중심국이므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은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결국 중동 지역 전체로 파급될 수 있음.
-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다면 결국 국민의 74%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집권하게 되어 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도 시리아의 수니파 집권을 반기지 않고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급진주의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노승재 (3779-5726)
sjnoh@koreaexim.go.kr

14) 시리아의 산유량은 일 35만 배럴로 리비아(160만 배럴)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